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계 반응 엇갈려

교육부가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15% 내로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현장을 무력화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수 있을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2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앞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급 한국교총·시·도교총 회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법과 수위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총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을 자격으로 정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시행되면서 근무평정, 연구실적 등 교원으로서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오직 교육감과 연관된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인천·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교장으로 배출됐고, 소위 진보교육감과 특정노조 세력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그럼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하며 보직교사 등 갖은 일을 도맡아 하는 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교장공모제를 통한 한 번의 서류 지원과 면접이 25여년간의 교직경력 동안 쌓아온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점수보다 타당할 역량 검증 절차인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일방적인 확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교조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계획을 환영한다”며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수 있을 기회가 넓어짐으로써 학교혁신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학교자치와 학교혁신을 일반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현재 자율학교로 한정돼 있는 내부형

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즉각 철회해야”

전교조 “유능한 평교사 교장 임용 기회 넓어져”

교장공모제를 일반 학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교장공모제는 공모에 응하는 일면식도 없는 외부 인사를 짧은 기간에 검증하고 선발하는 것이 어렵고, 학교장의 역할이 주로 교사와의 업무 관계 속에 이뤄지는 것에 비해 공모 교장 임용에 관한 교사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자치 강화는 교장 임용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을 줄여 학교 자치 기구에 배분해야 비로소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며 “교사회, 직인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 등 기구들을 법제화해 권한을 배분함과 동시에 학교 자치 시스템에 적합한 학교장을 단위 학교 교육주체들이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이 일정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게 하는 ‘교장선출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명박 정부 이

래 교육부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교장자격증 미소지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비율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늦었지만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에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을 결정한다면 그 학교가 자율학교이든지, 일반학교이든지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뉴시스



남해를 찾은 겨울철새 27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설천면 인근 바닷가에 겨울철새 떼가 날아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도 고속버스 타고 여행가자’ 소송 나선 장애인들

오늘 광주 첫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 제기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 5명이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시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나선다.

27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교통 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 책임을 묻기 위해 28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버스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다.

그 동안 저상 버스 도입 등을 주장하며 명절 때마다 고속버스 타기 캠페인을 벌였던 뇌병변 장애인 5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국토부와 광주시, 버스 회사가 저상

고속버스와 저상 시외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은 광주에서 처음이다.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단으로 나선다.

“시외 이동권 보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국가·지자체·운수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소장 접수에 앞서 이들은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설명한다. 김용복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 공동대표는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에서 버스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관건이 있었고 국토부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인권위 결정도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관건은 없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IS,리비아송유관 폭파...유가 최고치

2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송유관 폭파 사건이 발생해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이날 리비아 주요 원유 터미널인 에스 시데르로 이어지는 송유관이 폭발하면서 리비아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7만~10만 배럴 감소했다고 C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11월 기준 리비아에서는 일일 97만 30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됐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국제 유가는 폭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50달러(2.6%) 오른 59.9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WTI 가격은 장중 60달러를 웃돌며 2015년 6월 25일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1.77달러(2.7%) 상승한 67.02를 기록했다. 한때 67.10달러 까지 오르며 2015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리비아 동부의 원유 시설을 관장하는 무프타흐 암가리예프 대령은 AP 통신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IS 세력이 송유관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리비아는 2011년 민주화 혁명으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전 대통령이 축출된 뒤 여러 정치 세력이 부상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다. IS 등 테러 단체들은 치안 공백을 틈 타 이 곳에서 영역을 확장했다.

홍콩-주하이-마카오 대교 개통 내년 봄 연기

세계 최장 대교인 총연장 55km의 홍콩 주하이-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대교(港珠澳大橋) 개통이 내년 봄으로 미뤄졌다고 NNA가 27일 보도했다.

사이트는 중국 광둥성 발전개혁위 발표를 인용해 7년여간 공사를 끝내고 연말로 예정했던 대교 개통이 2018년 3~4월 이후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계획대로면 대교 개통 3개월 전에 통행료를 공표해야 하는데 통행료 징수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1일에야 열렸기 때문이라고 사이트는 지적했다.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 3곳에서 운수업체와 전문가 등 22명이 모여 통행료 징수안 2가지를 협의했다. 대교 운영 등의 비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2~3년마다 통행료를 조정할 방침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여한 홍콩 록마차우(洛馬州) 중형화운연합회 장즈웨이(蔣志偉) 주석은 버스 통행요금을 편도 200위안(약 3만2900원)으로 설정하는데 참석자 90%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교 건설비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계획 때보다 통행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한다.

광둥성 발전개혁위에 따르면 대교의 연간 관리비용은 22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30년 동안 연간 평균 대교 통행차량 대수는 2072만5700대로 잡았다. 종전 예측한 2153만16900대에서 81만2000대 낮춰 잡았다.

런던 쇼핑가 총격 거짓 신고에 아비규환

영국 런던 옥스퍼드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짓 신고에 수많은 쇼핑객이 혼비백산해 대피하는 바람에 1명이 다쳤다고 가디언, BBC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박싱데이(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옛 유럽 영주들이 주민들에게 상자에 담은 선물을 전달한 데서 유래한 이날 오후 4시50분께 연말연시 쇼핑객들로 붐빈 옥스퍼드가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신고를 받은 무장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담당 경찰과 무장 경찰들은 옥스퍼드가에 있는 대형 백화점 하우스 오브 프라이저에 출동해 주변 지역의 출입을 통제한 뒤 조사했지만, 탄환이 발사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피하다 넘어진 여성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다.

런던 경찰청은 성명에서 쇼핑객들이 백화점 밖으로 물러나오는 바람에 여성 1명이 넘어져서 다쳤고 대형 유리창이 깨졌으며 총격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트위터 사용자들은 옥스퍼드 거리에서 총격사건 신고 뒤 수백 명이 달아나고 비명을 지르는 등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포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